

李 대통령, G7 캐나다 회의서 다자 정상외교 시동

남아공 대통령·호주총리와 회담
교역·에너지 강화·북핵 해결 협력
트럼프 귀국에 한미회담은 불발
오늘 한일회담...과거사 원칙 대응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시릴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른 나라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로 통해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캘거리 시내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계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APEC 창설 멤버로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이었

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양해를 구해온 상황과 관련해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서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

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역시 “가장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들고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17일 오후(한국시간 18일) G7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고, 경제·안보 협력 등엔 실리에 따라 대응한다는 ‘투트랙’ 대응 방침을 지속해 밝혀왔다.

한일 회담에서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새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김원이,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사진)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원내대표, 주1회 정례회동 합의...현안엔 이견

첫 상견례서 대화·협치 복원 공감
김병기, 추경 처리 협조 요청
송언석 “법제사법위원장 달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대화·협치 복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날(16일) 선출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추경 처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당선 축하 난을 선물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합리적 리더십으로 여당을 잘 이끌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회의 오랜 아름다운 관행이 많이 무너지고 협치가 무너진 데에 국민의힘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야당 된 입장에서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여당이 됐으므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가는 데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한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 입법부 내 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 축하난을 전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화위재·연합뉴스

호 견제·균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요구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를 우선으로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대표님은 예산·정책 통이신 만큼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늘 행동하겠다. 야당과 협력·협치는 필수다”며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앞으로 자주 만나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회동을 정례화하고, 이외에도 수시로 만나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만났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경과 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등 사법 관련 법안을 거론하면서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하겠다. 다만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주철현, 여수·광양항 주도 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사진)은 17일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여수·광양항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항만·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 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와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 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 받고 있다”면서 “여수·광양이 주도하는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초청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여

야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으로 초청하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므로 현재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강 비서실장·우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

자들에게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라도 하는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저도 기본적으로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소통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그건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